세계 경제 동향

○ 미국 무역법 122조 관세 발동 ▌2026-2-26 중앙일보; 한국은행

- '26년 2월 24일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 10%'가 발효됨. 이는 '26년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한 수단임.
- '26년 2월 25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22조에 따른 10% 관세를 일부 국가에 대해서 15%로 인상하는 등 국가별 차등 적용 방침 가능성을 시사함. 또한,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가 지속가능한 관세 부과를 위한 수단이 될수 있으며, 불공정 무역 관행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관세 부과 등의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언급함.
- 한편, 경제·법률 전문가들은 무역법 122조가 1970년대 국제수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으로, 무역적자를 명분으로 발동하는 것은 법 취지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제기함.
- '26년 2월 26일 한국은행은 미국의 임시 관세 부과로 한국의 관세율은 기존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평가하며, 향후 품목별 관세 부과 등 미국 정부의 대응에 따라 한국의 수출 등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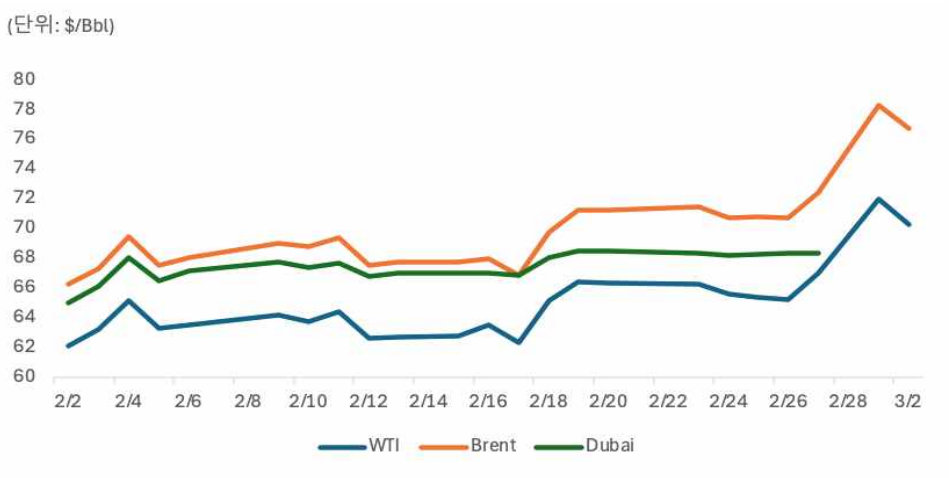
○ 미국·이스라엘 이란 공습 ▌2026-2-28 매일경제; 2026-3-1 연합뉴스; 2026-3-2 매일경제

- '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전역의 다양한 지점에 대한 합동 군사 공습을 단행하였으며, 이란 정부는 3월 1일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의 사망을 공식 확인함.
- 이에 대응하여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요르단 등 중동 내 미국 기지를 공격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선언함.
-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직후 비상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유조선·LNG선 운항 현황을 긴급 점검하고, 수개월분 비축유와 충분한 가스 재고를 바탕으로 수급 위기 대응력이 충분하다고 밝힘. 아울러 긴급 대책반을 가동해 매일 사태를 모니터링하고, 실제 수급 차질 시 중동 외 대체 물량 도입과 비축유 방출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임.

▌미국 관세 부과 법적 권한 ▌

관세 부과 근거	사전조사 필요 여부	부과기간 상한	관세율 상한
무역법 122조 (심각한 대규모 무역적자)	-	150일 (의회 승인 시 연장 가능)	15%
무역법 301조 (불공정 무역관행)	USTR 조사	4년 (이해관계자 요청 시 연장 가능)	-
무역확장법 232조 (국가안보 위협)	상무부 조사	-	-
관세법 338조 (외국의 차별적 행위)	-	-	50%

▌'26년 2~3월 국제 유가 추이 ▌



국내 경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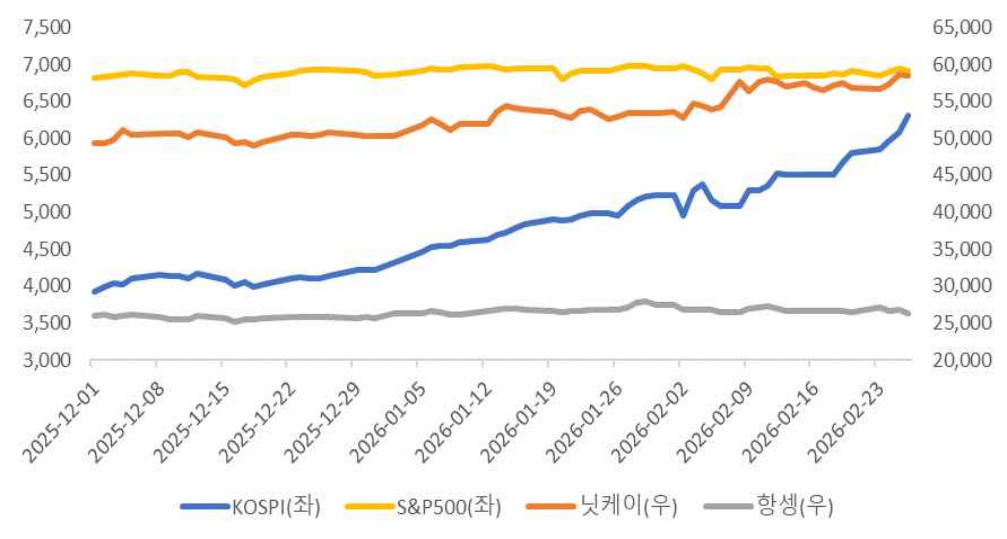
○ 코스피, 글로벌 주요 지수 중 연초 대비 최고 상승률 ▌2026-2-26 동아일보; 한국은행

- '26년 2월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6,000선을 돌파함. 올해 들어 코스피는 이달 25일까지 44.4% 상승하며 일본 닛케이평균(+16.3%) 등 주요국 증시를 크게 앞질러 세계 주요국 증시 중 상승률 1위를 기록함.
- 코스피 상장사 시가총액 합계(5,016조 원)도 사상 처음으로 5,000조 원을 돌파하였으며, 이 중 삼성전자(시총 1,320조 원)·SK하이닉스(725조 원)가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상회함.
-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실적 호조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함. 하나증권(7,870), 노무라금융투자(상반기 8,000 돌파 가능) 등 국내외 증권사들이 공격적인 목표치를 잇따라 제시함.
- 다만 취업자 수 증가폭이 '24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실업률이 두 달 연속 4%를 나타내는 등 실물경기와 증시 간 온도 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유동성에 의존한 상승세가 금리 상승 국면에서 급격히 되돌려질 수 있다는 경고도 제기됨.
- 한편, '26년 2월 26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동결(2.5%)을 발표하며, 수도권 주택 가격, 가계부채 리스크, 환율 변동성 등에 유의하며 통화정책을 운용할 것이라고 밝힘.

❖ 코스피 급등에 따라 주식 거래대금 및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증권거래세 과세 기반이 확대되고, 이에 연동된 농어촌특별세* 세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에 근거하여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 지역 개발을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목적세로, 증권거래세의 15%를 부가세 형태로 징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업에 활용됨.

▌'25년 12월~'26년 2월 KOSPI 및 세계 주요 주가지수 추이 ▌



세계 농업·농정 동향

○ 미국, 농업법 근거 2억 6,300만 달러 농식품 구매계획 발표 ▌2026-02-19 미국 농무부; 2025-08-05 미국 의회조사국

- '26년 2월 19일 미국 농무부(USDA)는 농업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전국 푸드뱅크 및 영양지원 프로그램에 공급할 최대 2억 6,300만 달러 규모의 유제품 및 농산물을 미국 농가로부터 구매할 계획을 발표함.
  - 농업법 제32조는 미국 관세 수입 30%를 농업부문 지원에 배정하는 제도로, 1935년 도입 이후 잉여 농산물 수매·기부, 아동급식 프로그램 지원, 재해지원 등 다목적으로 활용되어 왔음.
- 이른바 "USDA 식품"으로 불리는 이 농산물들은 농업마케팅청(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이 구매할 예정이며, 구매물자는 긴급식품지원프로그램(The Emergency Food Assistance Program)을 운영하는 푸드뱅크를 포함한 USDA 식품영양서비스(Food and Nutrition Service) 영양 지원 프로그램에 공급될 예정임.
  - 구매 품목 중 유제품은 버터(7,500만 달러), 체다치즈 및 치즈 제품(3,250만 달러), 스위스 치즈(1,000만 달러), 신선 액상 우유(2,050만 달러), 고온살균 우유(1,000만 달러)로 구성됨.
  - 농산물은 병아리콩(1,200만 달러), 건조 콩(2,500만 달러), 렌틸콩(1,400만 달러), 완두콩(2,400만 달러), 신선 배(1,500만 달러), 피칸(1,000만 달러), 호두(1,500만 달러)로 구성됨.

❖ 미국 농업법 제32조는 관세 수입을 재원으로 잉여 농산물을 수매한 뒤 취약계층 식품 지원에 연계하는 구조로, 수급 안정·복지·영양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 사례임. 한국도 품목별 사후 보전에 머무는 현행 방식에서 나아가, 공공수매를 상시 수급 안정 수단으로 제도화하고 농정과 복지를 연계하는 체계 구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내 농업·농정 동향

○ 이재명 대통령 농지 전수조사 및 매각 명령 강화 지시 ▌2026-02-2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02-26 한겨레; 2020-08-03 농림축산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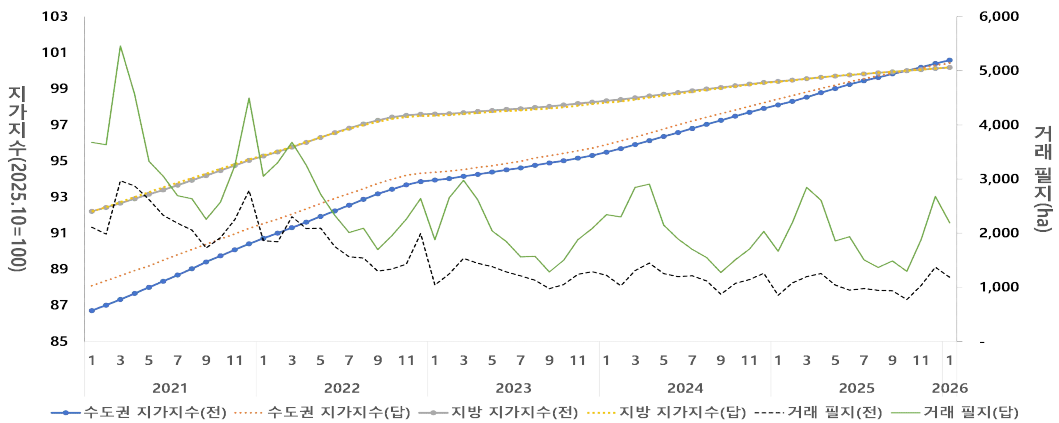
- '26년 2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인구 증감 분석'을 보고받고, 귀농·귀촌 희망자의 농지취득이 지가 상승으로 어려워졌다고 지적하며, 농지 관련 세제·규제·금융 전반의 검토와 함께 대규모 인력을 투입한 농지 전수조사를 관계 장관에게 지시함. 또한, 취득 후 방치 농지에 대해 매각 명령 방안을 별도 보고할 것을 지시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고위험군 표본조사 방식에서 전수조사에 준하는 특별조사 준비에 착수함.
  - 현행 농지법상 불법 임대·방치 농지가 확인되면 처분의무 통지 → 1년 내 처분 또는 경작 → 불이행 시 처분명령 → 이행강제금 매년 부과의 단계적 제재가 적용됨.
- 농지 처분의무 통지 대상자는 '10년 9,527명에서 '23년 5,855명(-39%)으로, 처분명령 대상 면적은 316ha에서 151ha(-52%)로 줄었으나, 이행강제금 부과 총액은 73억 원에서 111억 원(+53%)으로 증가함.
- 최근 5년간 전국의 농지 거래량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지가는 상승세를 유지함. '21년 대비 '25년 수도권 농지지가지수는 전·답이 각각 10.9%, 12.2% 상승한 반면, 지방은 전·답이 각각 6.7%, 6.5% 상승에 그침.

❖ 농지조사 확대와 매각 명령 강화로 향후 방치·불법 임대 농지에 대한 처분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이로 인해 귀농·귀촌 희망자 등 실경작 농업인의 농지취득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다만 실효성은 조사 집행력 및 처분명령 이행 여부에 달려있어 후속 제도 정비가 병행될 필요가 있음.

▌'10~'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

구 분		2010	2015	2020	2023
농지처분 의무 통지	대상자(명)	9,527	7,070	8,080	5,855
	전체 조사대상자 대비 비중(%)	0.6	0.6	0.7	0.3
처분명령	대상자(명)	1,508	1,196	1,706	1,416
	대상 면적(ha)	316	193	205	151
이행강제금	대상자(명)	757	474	607	502
	부과액(백만 원)	7,313	5,269	6,180	11,158

▌'21~'26년 1월 지가지수 & 토지거래현황 ▌



자료: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